

벤처·기업투자 ‘규제 완급’… 은행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부, 첨단산업·지방경제 투자 등 중점 전략분야 250조 자금 편성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주담대 비특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대기업 편중 대출 포트폴리오 과제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쏠린 금융자금을 벤처·첨단산업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출범 10개월을 앞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벤처 기업 투자 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급’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흐름도 기업금융 분야로 대거 이동했다.

◆ ‘생산적금융’ 10개월…기업대출 ↑

정부는 지난해 9월 장기간 계속되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가가치가 낮은 대출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잠재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성장한계를 맞은 지방기업으로 재배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규제 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벤처 분야를 비롯해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경우 위험가중치(RWA)를 낮춰 같은 자금으로도 더 많은 대출



주요 은행 대부분 올 상반기 생산적금융 목표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 /뉴시스

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 대출 영역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으며,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치도 제한했다.

정부는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산업·지방경제 등 중점 전략분야에 투자하도록 2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했다.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정부가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도 15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은행권 자금은 빠르게 이동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873조 845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만에 28조3591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

기업대출 증가분인 9조1158억원과 비교해선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257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상반기 증가분인 20조699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기업대출 증가에 은행 수익성 ↑

은행들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목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도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주담대 등 저위험 가계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각 은행들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린 모습이다.

기업고객은 외환거래나 임직원의 급여

이체, 퇴직연금 운용 등 여·수신 업무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이용률도 개인 고객보다 높다. 특히 각 은행들은 장기 거래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신규 대출 유치 시에는 장기간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사들이 추정하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상반기 순이익은 11조60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6% 증가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은행 계열사의 대출 수익성 개선이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기업 편중’·‘건전성’ 과제

은행권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 포트폴리오는 과제로 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5조1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 증가분이 3조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이 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신규 대출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대출로의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자금

이 조성됐지만, 업황이 좋고 전망이 밝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자금이 우선 투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벤처기업 및 지역산업 영역에도 자금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로 투자되는 은행권 자금은 다소 제한적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가파르게 상승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과제로 남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인 0.09%의 8배 이상이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문턱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상환능력이 확실한 장기 거래 기업·우량 기업에만 대출을 내주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제3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은 곧 충당금 부담 증가와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연체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무턱대고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은행과 제2금융권 계열사 간 연계대출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다소 제한적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카드사, 카드론 역대 최대 찍고도 수익 뒷걸음질

중금리 대출 확대, 카드론금리 하락
카드사 8곳 1분기 카드론 수익 1.3조
전분기 비 156억, 전년비 164억 줄어

카드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카드론 수익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카드론 평균 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최근 여신전문채권 조달 비용이 상승한 것까지 고려하면 카드사들의 카드론 관련 순수익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지난 1분기 카드론 수익은 1조3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156억원, 전년

동기 대비 164억원 줄었다.

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약 6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롯데카드 28억원, 우리카드 24억원, KB국민카드 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약 12억원, 현대카드는 7억원가량 감소했다.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지난 1분기 카드론 잔액을 살펴보면 1월 42조 5850억원, 2월 42조 9022억원으로 지속증가하다 3월 42조 9942억원을 기록, 당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43조를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카드론 잔액 증가와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이 엇박자를 내는 배경으로는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가 꼽힌다. 당국의 포용 금융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렸으나 중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 마진이 남지 않았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카드사들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은 카드사에 중금리 대출 취급분의 80%만 가계 대출 규제 총량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금리 대출 자체의 금리가 낮아 대출 외형만 커지고, 카드사 수익성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그간 중금리 대출을 많이 늘려왔다”며 “중금리 대

출이 기본적으로 금리가 싸다보니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가 감소하는 추세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13.63%에서 2월 13.39%로 0.24%포인트(p) 하락했다. 3월과 4월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카드사들의 순수익은 통계보다 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 카드론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수치”라며 “최근 여신채 조달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카드사들의 순수익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경영실적 평가

금융위, A~E 총 6개 등급 나눠
결과 성과급·내년 예산에 반영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뿐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과 정원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부터 국책은행

등 소관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결과는 최고등급인 S(탁월)과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매겨진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해당 기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평가와 임직원 성과급이 정해지는 데다 다음해 예산·정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관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최고등급인 S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고, A등급(기본급 180%) B등급(기본급 150%) C등급(기본급 110%)으로 나뉜다.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D와 E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직전 경영평가에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은 기업은행의 성적표에 이목이 쏠린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초 전·현직 임직원이 연두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퇴직 직원이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을 통해 7년간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사고를 감안해 기업은행은 경영실적평가의 내부통제 부문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안전관리 부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은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4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평가 대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빠르고 투명한 해외송금

「Fast-Fit 송금」 서비스 출시

수취 월급 보상으로 매월 가능성 제고
송 수수료 1만5천원으로 송금 부담 완화

송 하나은행

하나은행 해외송금 더욱 빠르게 ‘페스트 핏 송금서비스’

하나은행은 13일 해외송금 손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송금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보낼 수 있는 ‘페스트 핏(Fast-Fit)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Fast-Fit 송금 서비스’는 그동안 해외 송금의 불편함으로 지적됐던 ▲장시간 입금 소요시간 ▲최종 수취금액 확인의 불분명함 ▲송금 진행상태 확인 어려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다.

송금을 보내기 전에 수수료와 수취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송금 후에는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위프트(Swift) 송금망의 개선된 결제방식인 ‘리테일 페이먼트 스킴(Retail Payments Scheme)’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 서비스로, 지난 6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참여해 10개국 26개 은행에서 우선 시행됐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해 미국으로의 Fast-Fit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호주, 캐나다 등으로 송금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